

中, AI·드론 등 무기체계 첨단화 韓, 수출 경쟁력 확보 ‘골든타임’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

中, 첨단무기 기반 방산 굴기나서
‘민군 융합’ 전략 통해 경쟁력 강화

韓, 제3세계 무기 수출 확대 추진
“민간기술, 방산 활용 근거 마련해야”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시된 로봇 늑대 /산업연

중국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무인 전력 중심으로 무기체계 첨단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벗어나 글로벌 방산시장 전면에서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 역시 제3세계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의 정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유기적으로 이식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무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무인 전투로봇 ‘로봇 늑대(机器狼)’, AI 기반의 ‘벌떼 드론(蜂群无人机)’,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 등을 개발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간 첨단

기업의 기술을 방산기업에 직접 투입하는 구조적 전략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AI, 드론, 로봇 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선 민간 산업 육성 - 후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방산 기업 통합도 속도를 내며,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선박집단(CSSC)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기체계별 주요 기

업 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변화는 방산 수출 지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등을 앞세워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역시 J-10C 전투기와 왕룽 드론 등을 앞세워 같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수로 기반을 닦은 뒤, 파키스탄·태국·미얀마·알제리 등으로 재래식 무기 수출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도 무기 수출선을 넓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서방국 의존도가 낮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국가들이 중국 무기체계를 수용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박해지 연구원은 “한국도 재래식 무기 중심의 수출 전략을 넘어, AI·드론·전자전 무기 등 첨단전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민간기술을 방산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2025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7847억 위안(약 358조원)으로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군 현대화’ 달성,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국방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이창용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중요”

ADB-BOK-JIMF 컨퍼런스

“금리 등 대내외 충격 기민하게 대응”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책을 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하자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놔다. 이후 한국은행도 금리가 낮아져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보다 더 정책조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정도와 전(全)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상태, 내부통제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직접 들여다 보고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거시건전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비은행 금융감독기관도 한은의 자료를 받아야 하니 공동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지 감독기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정책수단을 나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한국은행

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개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정책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제시는 정책방향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환율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되, 대내외 충격으로 환율의 변동 속도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금리정책, 외환시장 개입 등의 조합을 통해 속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음원플랫폼업체 “보상 등 상생안 재조정해야”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논란

잠정 동의의결안 반발 움직임
“이미 회복 불가능한 타격 입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허용키로 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공정위가 구글과 토종 음원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들은 공정위가 구글과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실감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의미하나, 이미 수년간 누적된 음악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결과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지원으로 구글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들이 공정위가 구글과 합의해 내놓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켓GPT 생성 이미지

부터 이미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 대상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75억원) ▲재판매사(리셀러)와의 제휴를 통한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75억원)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150억원) 등을 약속했다.

국내 음원 업체들은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 결합 상품을 기획할 때 음악 서비스 외 이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해 혜택을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기대하는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

스’ 결합 상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유튜브 라이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사·카페·편의점·베이커리 등의 할인 혜택을 합친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며 유튜브의 시장 잠식 속도가 가팔라져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음원사들은 ‘유튜브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할인 상품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으로 상생안을 재조정해야 그간 음악 플랫폼 업체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금번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특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방안이 직접 피해자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었다. 해당 재원을 음악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활용할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긴 시장 피해에 대해서도 구글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신속과제 예고

국정위 “내일 피해자 간담회 개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

조승래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신속추진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됐다”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 등 피해자 구원 필요성과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인공지능(AI), 인구 문제 등 다부처 사안을 복합·전략적 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국정위는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에 더해 복합전략 과제까지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0개 안팎의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결론을 낼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개편의 방향에 대해 의견들이 조금 갈리고 있다”며 “점점이 만들어진다면 관련된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점점이 만들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디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국정위가 신설을 검토 중인 ‘미디어 혁신법 국민협의체(가칭)’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협의체에서 이 내용들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